권두언

의료보험 통합과 정책과제

車 興 奉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말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법』을 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정책을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의료보험통합호가 닻을 올려 이제 막 출범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논쟁과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산고가 컸던 만큼 통합호의 순항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그러면 의료보험통합호가 지향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이며, 항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또한 무엇인가 ?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개인이 시장기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보험과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그 목적이고 사회공동체적 재원조달이 그 수단이다.

지금까지 우리 의료보험은 이와 같은 사회보장정책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조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연대성의 기능을 소규모의 조합범위안에 묶어 놓고 재원조달의 국민공동체적 메카니즘을 작동할 수 없도록 구조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의 기제를 이처럼 조합단위로 묶어놓는 바람에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조합

의료보험 통합은 국민 개개인의 부담능력과 형편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전국민적 차원의 공동체적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급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의 재정불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험급여는 재정이 어려운 조합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하향평준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의 비형평성－재정불안－저수준 보험급여』의 굴레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들도 의료보장의 혜택을 피부적으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통합은 이와 같은 결격형 의료보험제도의 소극적 굴레에서 벗어나 『부담의 형평성－적정보험료－재정안정－적정급여』의 적극적 굴레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부담능력과 형편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전국민적 차원의 공동체적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급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적정부담·적정급여·재정안정』의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통합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 의료보험의 급여범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건강에 대한 욕구와 의료서비스는 무한정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무한정성의 서비스를 사회공동체적으로 그 비용을 해결하는 의료보험제도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의료보험제도는 꼭 필요한 수준의 적정급여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적정부담 측면에서 형평부담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부담 측면에서 경제적 능력, 특히 소득능력에 비례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해야 한다. 한편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지나치게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 역진성을 점차 완화시켜 나가는 작업도 같이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재정의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것이 전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도 이 추세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보험료부담으로 충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재정으로 충당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보험급여비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부담을 조정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리를 실현토록 함과 동시에 부담능력 범위에서 보험급여비를 억제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장치도 함께 만들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모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요구된다. 통합의료보험의 조직운영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작은 조직, 적은 인력, 경쟁과 능력에 기초한 인사·보수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의료보험관리업무의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 관리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